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최첨단 기대’ 물거품

긴급진단 <하> 면허시험 기능만 갖춘 ‘반쪽 시험장’

AI센터·첨단 장비 예산 전무…후속 사업도 불투명
차고동·정비동 등 제외…미래 모빌리티 구상 ‘미완’

전남광주 북부권 주민들의 30년 숙원사업인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이 당초 내세웠던 인공지능(AI)·자율주행 관련 시설을 갖추지 못한 채 추진될 전망이다. 교통·모빌리티 시설을 집약한 ‘최첨단 시험장’을 표방했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핵심 시설이 후속 사업으로 밀리면서 면허시험 기능에만 치중한 ‘반쪽 시험장’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한국도로교통공단, 광주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북구 삼각동에 조성되는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사업은 당초 1단계 면허시험장, 2단계 AI센터, 3단계 자율주행시험장을 구축하

는 구상으로 추진됐다.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은 단순히 면허시험과 갱신 업무를 처리하는 시설을 넘어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시험·평가하고 인증하는 거점으로 주목받았다. 옛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사업비 증액 계획을 발표하면서 AI 모빌리티 인증센터를 추가로 구축해 자율주행차 등 차세대 모빌리티에 대응하는 전국 최첨단 시험장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구상에는 정보기술(IT) 기반 운전면허 평가시스템과 가상현실(VR) 평가시험장, 기존 주행시험 코스를 활용한 자율주행 시험·평가 체계 등이 포함됐다.



자율주행시험장과 AI 모빌리티 전문가 양성센터, 미래교통안전시설 시험연구센터 등을 연계한 기술인증·시험·평가단지 조성도 검토됐다. 면허시험장을 넘어 미래 교통기술을 지원하는 기반시설로 육성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1단계 면허시험장 건립에 한정돼 있다. AI센터 건물과 첨단 장비 구축에 필요한 예산은 사실상 반영되지 않았고, 자율주행시험장도 구체적인 사업 일정과 재원이 확정되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12월 사업비 증액 발표 당시 AI센터 조성 계획이 함께 알려지면서

면허시험장과 미래 모빌리티 관련 시설이 동시에 들어설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증액된 사업비 82억원 가운데 AI센터와 관련해 반영된 금액은 설계비 3억원 뿐이다. 나머지 약 79억원만 기존 사업의 부족한 건축비 약 49억원과 감리비 약 30억원을 충당하는 데 쓰여 AI센터 건립이나 첨단 장비 구매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AI센터는 면허시험장 건립이 마무리된 뒤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사업 주체와 재원 확보 방안 등이 구체화되지 않아 실제 건립 여부와 시기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율주행시험장 역시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어 최첨단 모빌리티 거점이라는 당초 청사진이 언제 실현될지 불투명하다.

사업 규모 축소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본청 연면적은 당초 지하 1층·지상 3층, 4018㎡에서 지하1층·지상2층, 3035.4㎡로 줄어든다. 전체 사업비를 증액했는데도 추가로 약 35억원이 부족해 설계 변경과 총사업비 조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PC학과시험장은 233.84㎡에서 138.64㎡로, 대회의실은 110.88㎡에서 95.20㎡로 축소된다. 차고동(597.48㎡)과 정비동(93.08㎡)은 아예 건립 계획에서 제외됐다.

면허시험장 본래 기능을 위한 시설마저 축소되는 상황에서 미래 모빌리티 관련 시설까지 별도 사업으로 미뤄지면서 사업 전반의 완성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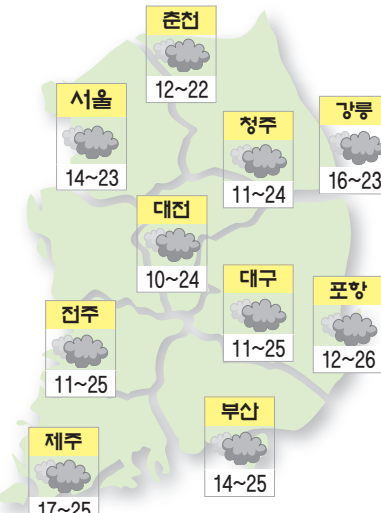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현재 사업은 면허시험 기능을 갖춘 시험장 건립이 핵심이며, AI센터는 별도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AI센터를 함께 조성하지 못하는 점은 아쉽지만, 우선 면허시험장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첨단 모빌리티 거점이라는 구상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려면 추가적인 계획 수립과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	예보	06:39	달달	12:00
☁️	예보	17:57	달달	21:23



광주	☁️	11~26
목포	☁️	12~24
여수	☁️	12~24
순천	☀️	9~25
구례	☀️	7~26
광주	☁️	8~25
진남	☁️	12~26
진남	☁️	16~24
진남	☁️	8~26
진남	☁️	10~24

목포	미물(고)	04:49 / 17:43
여수	미물(저)	10:02 / 22:50
여수	미물(고)	11:56 / 23:39
여수	미물(저)	05:09 / 18:05

기숙사 화재 대응 집중교육

마네편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안전교육이 진행돼.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남 오후 7시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 기숙사 인근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긴급 화재 안전교육을 실시.

이번 안전교육은 지난 13일 오후 10시 남부대 5층 규모 기숙사 2층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소화기 사용법, 교육용 완강기를 활용한 설치 및 사용 방법,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순으로 진행.

광산소방서는 기숙사생들에게 자동소화페치를 배부하며 화재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구동욱 광주권역본부장은 “기숙사는 다수의 학생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안전한 대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평소 소화기와 완강기 사용법, 화재 대피 요령을 숙지하고 화재 예방 수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부대는 이번 화재 사고를 계기로 화재 대피 요령과 완강기 사용법 교육을 강화할 방침.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내일까지 일교차 15도
전남광주, 18~19일 비

전남광주지역에서 오는 17일까지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지고, 18일 오후부터 19일 오전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15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남광주지역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17일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일 것이다.

다만 18일 오후부터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19일 오전까지 비가 내릴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18일까지 아침 기온은 7~20도, 낮 기온은 21~27도로 예보됐다.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송태영 기자 sty1235@



‘은빛 역사가 전하는 가을로의 산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15일 영신강변 서창역세발 일원에서 ‘은빛 역사가 전하는 가을로의 산책’을 주제로 ‘제11회 광주서창 역사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에서는 역사길 걷기와 노을 감상, 휴식 등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철회해야”

전남광주 교육·시민단체 촉구

전남광주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추진에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전남광주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저지를 위한 전남광주 긴급행동’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인다는 발상은 교육의 본질과 국가의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교육교부금 축소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긴급행동에는 전남교육회와 전국교육원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전국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광주·전남지부, 광주교사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전남교육청지부를 비롯해 학부모·노동·환경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교육재정은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확보해야 할 공적 자산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농산어촌과 도서벽지, 원도심과 신도시가 공존하는 전남광주는 지역별 격차가 큰 만큼 교육재정 축소가 작은 학교의 존립과 공교육의 공공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근거로 삼기보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

제주항공 참사 로컬라이저 둔덕 추가 재수색

굴착기 투입 주변 흙 제거…콘크리트 하부 확인
20일까지 체 작업…30일 잔해 크레인 이동 검토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해를 찾기 위한 무안국제공항 로컬라이저 둔덕 추가 수색이 시작됐다. 수색 당국은 굴착기로 둔덕 주변 흙을 제거하고 콘크리트 잔해를 하부까지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에 따르면 당국은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에서 로컬라이저 둔덕 주변 흙을 제거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수색 당국은 16일까지 굴착기를 이용해

콘크리트 잔해를 옆면이 드러나도록 주변 흙을 파낼 계획이다.

이후 잔해물 상태와 붕괴 위험 등을 확인해 하부 수색 방법을 결정할 방침이다. 굴토한 흙은 오는 19~20일 근·경차·소방 인력을 동원해 체로 거르는 방식으로 수색한다. 흙 속에 유해가 남아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콘크리트 잔해물 아래를 직접 수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전문가와 전문업체 관계자들은 H빔과 와이어 등을 활용해 크레인으로 잔해물을

들어 올린 뒤 하부를 확인하고, 원형을 최대한 보존해 원래 위치로 옮기는 방식을 제안했다.

당국은 주변 흙 제거 작업을 마친 뒤 잔해물 하부 상태를 확인하고, 16일까지 구체적인 수색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문업체의 중장비 동원 준비는 28일까지 진행되고, 30일까지 크레인 등을 이용한 잔해물 이동과 하부 수색을 마치는 방안을 잠정 검토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추가 수색을 모두 마친 뒤 새롭게 확인되는 유해의 장례 절차를 합동으로 진행할지, 개별적으로 치를지 결정할 계획이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골절 수술 후 후유장해…환자·병원 ‘공방’

골수염·불유합 확인에 감염 대응 적절성 등 논란
환자 측 “의료과실” vs 병원 측 “정상 진료·치료”

개방성 골절 수술을 받은 환자가 약 1년간 치료에도 골수염과 불유합,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며 의료과실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환자 측은 감염 의심 증상에 적절한 치료와 상급병원 전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병원 측은 정상적인 진료가 이뤄졌다고 맞서고 있다.

15일 본보 제보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광주특별시 남구 진원동 A병원에서 개방성 경골·비골 골절로 수술받은 뒤 약 1년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수술 부위 상처가 장기간 아물지 않고 삼출물이 지속됐으며, 2024년 1~10월 진행한 6차례의 균배양검사에서

균이 반복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세라티아 마르세센스(Serratia marcescens) 세균도 확인됐으며 최초 수술 당시 감염 검사 여부와 반복적인 균검출의 원인, 의료관련감염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치료 과정의 적절성도 쟁점이다. A씨는 항생제 투여와 상처 소독, 변연절제술 등을 반복했지만 상처가 호전되지 않았고, 한 달 이상 음압창상치료(PICO)를 받는 동안에도 삼출물과 상처 벌어짐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항생제 변경과 추가



검사, 감염내과 협진 등을 검토하지 않은 이유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금속 제거를 결정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A씨는 2024년 10월11일 수술에 앞서 의료진으로부터 불유합이 60~70% 진행됐고 이후 80% 정도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

나 이후 상급병원에서 불유합과 골수염을 확인했다며 당시 골유합 상태를 판단한 객관적 근거와 CT 검사 결과, 금속 제거술의 의학적 필요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급병원 전원 시점도 논란이다. A씨는 기존 병원에서 2024년 11월18일 퇴원한 뒤 다음 날 서울의 한 병원으로 진료 받았으며, 광범위한 골절제술과 골재건술, 유리파판술 등이 필요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기존 병원에서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는데도 전원이나 다른 진료와 협진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A씨는 치료 후 비골신경 마비와 보행 장애, 관절운동 제한 등이 남아 일상생활

과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근전도검사서 신경 반응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초기 신경 손상 상태와 치료 과정에서의 변화에 대한 설명도 요구했다.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핫팩을 적정성과 후속 조치도 문제 삼았다.

A씨는 감염과 불유합을 조기에 확인해 적절한 치료나 전원이 이뤄졌다면 추가 수술과 치료 기간, 후유장애 정도가 달라졌을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환자의 상태에 맞는 치료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며 의료과실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